

민주, 윤석열·최재형 쌍끝이 공세

“윤 전 총장 먼지떨이하던 사람” “최 전 감사원장은 탈영병”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T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과 관련해 “좀 그럴듯한 걸 내놓을 줄 알았는데 빈 수레가 요란했다”고 잘라 말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전 국민이 알게 한 계기가 됐다”며 “굉장히 불리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한일관계를 경색시켰다는 식으로 말한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한일

관계 경색은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으며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이라며 “윤 전 총장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시각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첫 인선이었던 이동훈 전 대법인이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을 거론하며 “바로 이런 것이 ‘카르텔’이다. 윤 전 총장은 자기 주변부터 돌아보라”고 꼬아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을 “특수부 검사로서 30년 동안 사람 먼지떨이만 하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사람은 갑자기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못 한다”라며 “(정치는) 석 달 동안 고시 공부하듯이 달달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경제, 민생, 부동산, 교육,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SNS에 “윤 전 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진

영과 손을 잡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불멸의 신성 가족 타령’이라고 비꼬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마치 초등학교 6학년이 덩치가 커졌다고 아빠 옷 입으면 핏가 부족하고 어색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한 것 날을 세웠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다코호스로 급부상하는 상황과 관련해 “군인으로 치면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탈영병”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최 전 원장은 출마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며 “본인이 몸담았던 감사원에도 치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승남 ‘저수지 안전진단 확대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일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확대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저수용량 30만 이상 저수지는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0만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만을 시행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각종 측정·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상태와 안정성을 평가하지만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시설 외관만을 점검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김승남 의원은 “2019년 홍수로 저수지 17곳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확대해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선 승리 원동력은 자치분권 혁명”

대선 출마 선언 최문순 강원지사

빈부·지역격차 해소 시대정신
지역에 기관·대학 유치
각종 세제혜택 권한 부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일 “차기 대선에서는 자치분권 혁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날 광주를 찾은 최 지사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지사는 “이제 중앙집권적 질서는 안된다”면서 “지역에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 개헌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부동산 문제 등은 전혀 진척이 없다. 하지만, 지역에는 많은 에너지가 쌓여있다. 자치분권, 지방소멸 등의 위기가 정치적 열망의 에너지로 쏟아진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反)이재명 연대와 일부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경선 과정이 자체 단일화 과정이다.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경선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필요하다.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묶어내고 이를 한데 모아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점수는? 그리
고 올바른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어찌보면 수도권 집중 투자가 더 이뤄지면서 수도권과 지역간 편차는 더욱 커졌다. 다음 정권에서는 분권 개헌까지 가야 한다. 단체장들에게 권한을 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 등을 내세워 기관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 나라를 뒤집는 수준의 분권 개혁이 필요하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꼽는다면.
▲저는 자치분권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다. 중앙집권은 한계가 있다.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저로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자치분권에서 만든 다른 후보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강원도에서 10년간 진보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이다. 그만큼 어려운 선거에 자신있다.

-호남지역에 관한 대선 공약은?
▲강호축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구상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서울과 부산,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정책으로 호남과 충청, 강원은 소외되어 왔다. 강호축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신경계지도 완성이 가능하고, 남북교류협력 촉진도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기승전 법사위’ 외치며 예산 성벽까지 쌓아”

민주 윤호중, 원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기승전 법사위’만 외치며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예산 성벽까지 쌓고 있다”며 원구성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 추경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장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겠다는 결단까지 했지만, 야당은 끝내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예결위 구성조차 못 해 추경 심사가 지체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결위 명단을 오늘 제출하겠다. 야당도 즉각 예결위 명단을 제출해줄지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로 1년차 예결위의 임기가 끝난 상황이라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심

사할 예결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법사위와 연계해 예결위원장 선출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힘든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지, 야당의 예산 바리케이드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도 양당 원내수석간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최대한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피해지원 패키지 지급방식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있는 것을 안다”며 “내일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촘촘히 소통하며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소급적용 없이 피해 지원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도초섬 내, 시세 9억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상담문의. 010-3605-5000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H. 010-2928-0202

오피스텔 부지, 급매

- ▶ 광주광역시,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매 - 23억(평당1300만원)

주식회사 미르. 010-3605-5000